

## 하나 글로벌 리서치

2021년 6월 10일 | 미국

# Global Issue Checks



해외기업 분석 김재임

jamie@hanafn.com

RA 김동우

dong-woo.kim@hanafn.com

## I G7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합의 & 빅테크 기업 시사점

### 〈최근 글로벌 법인세 관련 진행 사항: G7 최저 세율 15% 합의〉

- G7 재무장관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이익에 대해서 최저 15%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합의. 각 국가는 자국의 법을 개정하여 자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이 해외영업에 대해 각각 최소 15% 세금을 내도록 함.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번 최저 세율 합의가 적용될 경우 기업들이 세금이 낮은 'tax haven' 국가로 이전하는 동기 약화시킴
- G7 합의가 의미 있는 글로벌 세금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7월 예정된 G20에서의 동기가 중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135개국 포함된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에서의 합의 필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일부 국가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최저세율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세금 규제안을 제안

### 〈빅테크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점〉

- G7합의안이 이행되면 글로벌 기업들의 전체 세금 규모가 이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점은 최근 1~2년 사이 유럽 여러 국가에서 빅테크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디지털 세금'을 철회하고 향후에도 디지털 세금 관련 개별적인 세금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점
-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최근 몇 년 동안 유효세율이 이미 15% 수준이라는 점에서 G7 최저세율 합의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향후 유럽에서 디지털 세금 관련 각각의 개별 국가에서 새로운 세금 부과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통합된 글로벌 세금 시스템 마련은 세금 관련 불확실성 제거. 다만 이번 G7합의의 실제 이행 시점을 확인할 수 없기에 디지털 세금 철회 시점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음

### 〈최근 법인세 관련 진행 상황의 시사점〉

- 이번 G7 합의는 이미 다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최근 몇 년 동안 15%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유럽 개별 국가의 디지털세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우려이기 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 그러나 이번 합의가 실제 이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각국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고 G7 국가들은 미국의 진행을 보고 따라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조세조약 개정 안건은 상원 3분의 2 동기가 필요하기에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빅테크 관련하여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해왔음. 그러나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패키지 관련 공화당과 합의를 위하여 규모를 1조 달러까지 줄이고 법인세 인상 주장(21%에서 28%)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도됨.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사실상 양진영이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에 법개정이나 규제강화 등 빅테크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된 사항들이 실제 의미 있게 변화되기는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

---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1년 6월 1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는 2021년 6월 10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